

2023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평가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발굴·시상하고자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적극행정 사례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사례 중 본선 심사 진출 사례 선별을 위한 온라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사례 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순서에 맞게 평가(배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심사(40%) + 온라인심사(공무원 30% + 시민 30%) 결과*에 따라 최종심사 진출 결정

2023년 5월 18일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연번	사 례 명	배 점						
		30	25	20	15	10	5	0
1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이설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734백만원 환수기획 및 환수추진	○	○	○	○	○	○	○
2	농촌 복지택시 협의체 개최를 통한 복지택시 운영대상마을 확대	○	○	○	○	○	○	○
3	기업 집적화를 위해 분양된 분양용지 관리기관 신속 매입 추진	○	○	○	○	○	○	○
4	국내 최초, 사회복지시설 「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 인프라구축 사업 추	○	○	○	○	○	○	○
5	한장으로 체납액 전체 확인하고, 간편 납부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우편 송달료 절감	○	○	○	○	○	○	○
6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설치 지원사업	○	○	○	○	○	○	○
7	사전입찰 안내로 신속 집행 추진 및 재입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	○	○	○	○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이설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734백만원 환수기획 및 환수추진	사례번호	1
각종 대회 수상 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 요 내 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건축공사를 추진하며 공사부지에 포함된 지장물 (한전주, 통신주 등)이설비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 지장물이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96(2013.5.6.)」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의 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한전, 케이티 등 지장물 소유 공기업 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설비를 납부해야 지장물 이설 처리 추진함 「부가가치세법 제 4조 제1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지장물 이설은 보상비로 부가세 제외대상임) ○ 지장물 소유 공기업들은 부가세 제외 대상임을 알고 있으나 부가세를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청구해 오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정읍시에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과오납하여 전액을 환수하고자 함<국세 소멸시효에 따른 5년분만 환수 가능> ⇒ 환수대상 734백만원(공익사업 111, 지중화사업 592, 일반 31)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읍시 고문변호사 세차례 자문 이행 ⇒ 부가가치세는 보상비의 일환으로 환급 가능 회신 ○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5년분 전수조사<환수 소멸시효 계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5년간 부가가치세 회수가능 ○ 한전, 케이티 등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한 협의 추진 ⇒ 여러차례 공문발송과 공기업 담당부서 방문하여 협의 	

주요내용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인정고시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환급절차 진행 약속 ⇒ 한전과 케이티 모두 공익사업 증빙된 대상은 우선 환급 추진예정 소계 107백만원(한전 59백만원, 케이티 48백만원) 인정고시 및 부가가치세 증빙자료 송부 ※ 본 사업을 전라북도 전체,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도 환수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의 같은 사례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실무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 과오납금 환수는 부가세를 수납한 받은 기관 즉 한전, 케이티 등이 협조하여 법적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금이 어려워짐 ⇒ 실제 한전과 케이티 등 사내규정을 이유로 환급에 소극적임 ○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한 과오납금 전액회수 계획이며 소송추진에 많은 시일과 노력이 예상됨
	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읍시 고문변호사 5명 3차례 법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부가세 환수 가능,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한 환수 - 2차 : 공익사업 미인정 소규모 사업도 부가세 환수가능 - 3차 : 지중화사업도 일반 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부가세 환수가능 ○ 한전, 케이티 등에 지속적인 환급요청 공문발송 및 해당부서 방문 협의 추진 ○ 5년분 부가가치세 과오납 증빙자료 작성 송부
	미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과 케이티의 협의 이후 공익사업 인정고시 완료 사업장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장물 이설비를 지급하고 있음 ⇒ 감사과에서 안내공문발송 및 회의를 통하여 한전주 등 이설에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안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농촌 복지택시 협의체 개최를 통한 복지택시 운행대상마을 확대	사례번호	2
각종 대회 수상 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내용	추진 배경	○ 당초 운행 중이던 농촌 복지 택시가 1대에서 2대로 증차 됨에 따라 교통과에서는 기존 운행 대상이던 16개 마을에서 단 3개 마을만이 추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민원인들은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받기를 원하여 추진하게 됨	
	추진 내용	[주요추진사항] ○ 입암면 이장협의회 임원진(주민대표)와 협의 : 2023. 2. 23. - 운행대상마을 추가요청(6개마을) / 신등, 원하부, 만화, 평암, 엄동, 차단 ○ 주민 협의내용 교통과와 협의 : 2023. 2. 23. ○ 농촌복지택시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추진 : 2023. 3. 9.	
	주요 성과	○ 농촌 복지택시 운행마을 추가요청에 따른 택시대표 측 전부수용 협의 ○ 특정승객(거동불편 및 고령자)편의를 고려한 자택까지 운행요청 수용 협의	
	실무상 어려움	○ 입암면 총 38개 마을 중 총 22개 마을이 농촌 복지택시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나머지 마을도 추가로 원하고 있어 점진적인 확대 필요	
	해결 노력	○ 농촌 복지택시를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택시 업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체 회의를 통한 운행대상마을 점진적 확대 필요 (예:예산의 문제로 택시 증차가 어려운 경우 주요 사용시간을 파악하여 당초 08:00~18:00 운행 ⇒ 변경 10:00~16:00 / 운행대수 증차 검토)	
미담 사례	○ 추가로 운행 확대된 마을의 이장님과 마을주민들에게 복지 택시 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특히 특정승객 (거동불편 및 고령자)편의를 고려한 자택까지 운행요청에 대한 호응이 높음(당초 마을회관까지 운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기업 집적화를 위해 분양된 분양용지 관리기관 (정읍시) 신속 매입 추진	사례번호	3
각종 대회 수상 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주)디에스앤피 증설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나주 확장계획을 정읍에서 확장하도록 하여 철도농공단지에 분양 계약 완료(35억원) ○ 기존 제2산업단지에 (주)디에스앤피 1공장, 2공장, (주)디에스판넬 가동중 ○ 제2일반산업단지 구참토원 부지(37,236.6㎡) 매입 희망 ○ (주)디에스앤피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 집적화를 위해 기존 분양 완료된 철도산업 농공단지 산업용지를 정읍시에 재매입 요청(2022. 10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방법은 ① 관리기관에서 양수자를 선정 또는 기업체에서 제3자를 선정, ② 관리기관(정읍시)이 양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매각된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사례는 행정의 형평성 일관성 등의 사유로 없음 ○ 그러나 재분양 공고 및 기업체 제3자 선정시 오랜 시일이 걸리고 기업체 내부신용도 평가가 연말에 이뤄지며 (주)디에스앤피 내부 사정(근저당 채무이행 등)상 지연될수록 신용등급 하락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 우려 ○ (주)디에스앤피 제1, 제2공장 및 (주)디에스판넬이 제2산업단지에서 2021년 기준 120명(정읍시 근로자 95%) 1,218억원 매출 실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우수 중소기업임. ○ 현 기업체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2022. 12월 정읍시는 기존 분양된 철도산업농공단지 부지(입암면 하부리 2386 외 8필지) 추경예산 확보하여 최대 빠른 시일안에 재매입 후 권리 이전(31.6억) 		

주 요 내 용	주 요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디에스애피는 철도산업농공단지 매도를 통해 얻은 자본금으로 제2일반산업단지 부지(37,236.6㎡ / 3필지) 매입을 통해 기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운송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주축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 ○ (주)디에스애피 제3공장 운영에 따라 전체 인력창출 150여명과 매출액 2천억원을 목표로 공장 가동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은 정읍시에서 선발하며 어려울 경우 정읍 거주토록 할 계획 ※ 기업체 매수요청(22. 10월) → 처리계획 수립(22. 10월) → 처분 신청(22. 11월) → 매매계약(22. 12월) → 예산 확보(22. 12월) → 처분계획(22. 12월) → 처분신청 검토(22. 12월) → 처분신청 수리(22. 12월) → 반환금 지급(22. 12월) → 부동산거래계약신고(22. 12월) → 등기완료(22. 12월)
	실 무 상 어 려 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관(지자체)이 직접 분양용지를 매입하여 재분양하는 동일 사례 없으며, 관리기관이 매입 및 재분양이라는 사례를 만듦으로서 다른 기업체의 동일 요구 가능성 우려 ○ 분양 받았던 타 기업체 재매입 요구 남발시 형평성의 문제 발생 ○ 철도산업농공단지 분양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분양된 부지 반환금 31.6억원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사전 설득 ○ 기업신용도(연말 실적) 우수평가를 위해서 2개월 이내에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
	해 결 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기업체 동일 요구(분양 받았던 용지 재매입 요구) 우려에 대비해 정읍시 재매입 당시 분양계약금(10%)을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으로 매수함으로써 주변 타 기업체들의 재매입 요구 남발 억제 ○ 분양이 미완료된 상태였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양수토록 지자체장 및 의회 설득
	미 담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예산 확보하여 처리 및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별도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보를 보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국내 최초, 사회복지시설 「상사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사례번호	4				
각종 대회 수상 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내용	<p>사 례 배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읍시 경로당은 706개소로 이중 30년이상된 경로당은 120개소(17%)이며 과거 친목도모, 작업장 등에서 에서 공동주거생활시설로 변모하고 있음 -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에어컨, 전기발습, 안마기 등 전기용품 다수 보급 ○ 노후화된 경로당과 계절별 냉난방 전기용품 사용 등으로 전기화재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 자체 역량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집중적인 전기용품 사용, 설비 노후화 등이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여 전기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 노유자 시설 전기화재점유율은 52.6%로 매우 높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정읍시 경로당 2개소 전기사용량 증가 비교(kWh)</p> <p>정읍면 창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기화재 비율 및 발화기기 현황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자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노유자 시설 전기화재 비율</th> <th>발화기기 현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전기적 요인 52.6%</p> <p>최근 5개년 전기화재 현황</p> <p>기타 (20%)</p> <p>부주의 (26%)</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81.7%</p> <p>최근 5개년 발화기기 현황</p> <p>전기발습, 병창고 (15%)</p> <p>에어컨 전열기 (26%)</p> <p>콘센트, 등기구 (20%)</p> <p>분전반, 배선 (20%)</p> </td> </tr> </tbody> </table> </div> </div>			노유자 시설 전기화재 비율	발화기기 현황	<p>전기적 요인 52.6%</p> <p>최근 5개년 전기화재 현황</p> <p>기타 (20%)</p> <p>부주의 (26%)</p>	<p>81.7%</p> <p>최근 5개년 발화기기 현황</p> <p>전기발습, 병창고 (15%)</p> <p>에어컨 전열기 (26%)</p> <p>콘센트, 등기구 (20%)</p> <p>분전반, 배선 (20%)</p>
	노유자 시설 전기화재 비율	발화기기 현황					
	<p>전기적 요인 52.6%</p> <p>최근 5개년 전기화재 현황</p> <p>기타 (20%)</p> <p>부주의 (26%)</p>	<p>81.7%</p> <p>최근 5개년 발화기기 현황</p> <p>전기발습, 병창고 (15%)</p> <p>에어컨 전열기 (26%)</p> <p>콘센트, 등기구 (20%)</p> <p>분전반, 배선 (20%)</p>					
<p>사 례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인 전기화재 위험성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상사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① 원격점검장치(누전, 과부하 등 센싱기술)의 안전데이터를 ② 관제시스템으로 전송(무선통신, 보안인증)하고 ③ 데이터 분석, 가공, 개방을 통해 안전정보 제공 ④ 이상 발생시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⑤ 이중 중대 부적합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보수 비용 지원 							
실무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전기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 시범사업 예산 확보 및 민간 참여 방안 필요 - 이를 위해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확보 및 민간 참여 유도 						
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행안부 공모사업 추진 결정 -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 '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 e가득 사업」 참여를 위해 내부 품의 ○ 사업공모 추진 - 지역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기안전공사와 사회복지시설, 「상사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방안 협의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원격점검장치 제조사인 비즈커넥트와 KT를 방문하여 컨소시엄 참여 및 5년간 무상지원 합의 						



- 비즈커넥트, 안전공사,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일반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기 안전 스스로 해결단 구성(민간5명, 전문가1명)
- 지역 현안 통계 자료 수집 및 제안서 제출(2월)→서류 통과(3월말)→ 과제개선 컨설팅 (4.14일)→ 최종발표심사(4.21일)→ 최종선정(5.1일)
- o 사업비 : 국비 1억원 확보(시비 없음)
- 인프라 구축 이후 5년간 비즈커넥트, 전기안전공사, kt에서 자체예산으로 무상 지원
- o 사업추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협약(5월)→ 현장조사(6월)→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8월) → 상사.원격점검 서비스(9월~)→ 사업비 정산(11월)

주요 성과

- o 30년 이상된 경로당 120개소에 전기안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으로 24시간 안전관리 실현
- o 전기안전관리법 원격점검 법령 개정 이후('21.12월) 국내 최초 적용 사례로 전국 확산 기대
- 전국 경로당 6만7천여 개소에 적용 가능하며 '장치 제조사+전기안전공사+통신사+지자체' 협력 모델임
- o 사업 수혜자는 5년간 2,700,000명이며 복지에 안전을 담은 선도적인 정책과제로 평가됨
- 경로당 1개소 당 1일 15명 이용하며 5년간 2,700,000명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한장으로 체납액 전체 확인하고, 간편납부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우편 송달료 절감	사례번호	5
각종 대회 수상 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 내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부과 부서 다양(민원인 담당부서 확인 어려움) • 본인의 체납 여부 전체 확인 어려움(부서별 고지) • 체납고지서 건별 발송으로 여러건 체납인 경우 송달료 과다발생 • 자동차 관련 등 체납자가 젊은층이 다수로 전자 납부에 친숙 • 세금, 과태료 납부시 금융기관 방문보다 전자납부 증가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고지서 발송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안내문 발송 (부과부서, 체납액, 가상계좌번호 표기) • 기존: 1건 체납 고지서 1장, 6건 체납 6장, 10건 체납 10장 발송 ⇒변경: 1~5건 체납 안내문 1장 발송, 6~10건 체납 2장 발송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 한 장으로 전체 체납액 확인 및 납부 가능 ⇒ 체납고지서 일부 미 수령시 체납 사실 미 인지 사전 예방 • 미거주자에 대한 불필요한 다량고지서 우편함 적재 해소 • 체납 건별 발송에서 체납자별 발송으로 고지서 제작 비용 및 우편 송달 비용 예산 절감 ⇒ 고지서 제작비 약 1/3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1. 2분기) 고지서 발송시 15박스(948,750원) 소요 └ 2023년(1. 2분기) 안내문 발송시 4.5박스(284,625원) 소요 ⇒ 발송 우편요금 약 1/3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1. 2분기) 고지서 발송시 8,596,800원 소요 └ 2023년(1. 2분기) 안내문 발송시 2,642,000원 소요 	

주 요	실무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 발송시 1개 부서에서 여러 세목 부과시 담당자 표기 어려움(부과부서 대표 전화 표기) • 체납자가 안내문을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시 직접 납부 불가능
내 용	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자료 전체 추출 후 세목별 담당자별 연락처 표기하여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 적극 해소 • 안내문에 전체 체납건수,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표기, 금융기관 직접 납부 불가능 안내 문구 추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설치 지원사업	사례번호	6
각종 대회 수상 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해당없음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 내용	추진배경	전기차 충전 중 화재발생 시 차량이 전소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주차장은 공간이 밀폐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질식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추진내용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비용 지원 : 14개 공동주택 43기 충전시설	
	주요성과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탄소중립사회 구축 실현	
	실무상 어려움	이전장소마다 설치여건(전기 인입 가능)여부, 충전기 형태(벽부, 스탠드형), 바닥형태(도로타공) 등에 따라 사업비 차가 커 기준 금액 산정에 어려움	
	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기 이전 전문업체(서울소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문으로 최대 민간자본보조금 산출함. • 공동주택별 보조사업 확정시 전문가 현장확인 및 설계내역검토로 예산 누수없이 사업 추진 	
	미담 사례	공동주택관리소장 :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시 위험성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으나,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감사 의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사례 제목 (정책명)	사전입찰 안내로 신속 집행 추진 및 재입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사례번호	7
각종 대회 수상 실적	행안부 제출 주간 적극행정 사례 여부	적극행정지원위 및 사전컨설팅 활용여부		
2019년 정책제안 (장려상)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매년 비슷한 시기에 국도비 사업을 집행함에 앞서 보조사업의 민간 입찰 대행 및 행정 주도 입찰 시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거나 입찰 참여업체가 1, 2개소 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		
	추진 내용	사업명에 따른 참여할 수 있는 관내 업체 종류 파악 후 공고에 따른 입찰 참여를 하도록 사전공지 및 유선으로 안내함.		
	주요 성과	관내 업체가 다수 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경쟁률 제고로 보조사업자는 적정 금액의 낙찰자 선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행정은 유찰되어 재공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실무상 어려움	입찰(물품, 공사, 용역) 등을 다수건, 오랜기간 업무 능력이 쌓인 유경험자가 유리한 것으로 보여짐.		
	해결 노력	입찰건에 대해 사전 관내 해당업체 파악 후 입찰에 참여를 유도 관내 소상공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실제로 낙찰자가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많았음.		
	미담 사례	부득이 재공고 시 관내 업체보다 관외 업체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사후 관리 및 사업비 집행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유도하였음. 유찰되는 경우는 유찰되는 사유에 대해 업체에게 물어보고 그 사유에 대해 법적, 절차상 사유 검토 후 다음번 입찰 건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